

# '똥약'을 아시나요?



| 김상우 / YTN 사회부 차장

'똥약'은 의약분업이전 검은 거래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을 막지 못하고

'똥약' 처방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영원히 엉터리약을 비싸게 사먹어야 한다.

'똥약'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똥약'이라고 그러니까 '개똥도 약에 쓰려고 하면 없다'는 속담을 먼저 떠올리며 혹시 한약이나 생약 등 어떤 약을 만드는데 필요한 약은 약인데 하며 똥으로 만드는 약인가 아닌가 하며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약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약이냐고요?

어떤 약인지 말하기에 앞서 이런 '똥약'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게 믿어지십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특히 선택권은 아예 소비자에게 없고 일방적으로 이 '똥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이게 우리 의료 현실의 현주소입니다.

지난 2년간 많은 분들이 이 말만 들으면 모두가 열변을 통하는 정치인이 됐었죠, 정치에 무관심하며 묵묵히 지나려 하다가도 이 단어만 들으면 말 그대로 개거품을 내며 흥분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의

로 이를 운명처럼 받아들여 다소 냉정을 되찾아 이 문제를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혀온 ‘의약분업’ 인데요. 지금은 분업 실시 3년째에 접어들어 그런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의약분업은 외관상으로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흥분을 진정시키고 안정국면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처방전을 통해 환자들이 먹는 약 일부가 이런 ‘똥약’입니다. 그것도 약 일부가 아니라 상당수로 확대되는 징후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욕 먹을 각오를 하고-아마도 그 각오 보다 욕을 더 먹었고 지금도 먹고 있지만- 의약분업을 실시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검은거래로 오가는 약에 대한 이윤을 없애 소비자에게 제대로 약을 공급하자는 것이었죠. 이른바 ‘약 실거래가 상환제’라는 제도를 바탕으로 이런 검은 거래를 없애려 했던 건데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제도는 ‘약발’이 잘 듣지 않고 분업 이전처럼 ‘똥약’ 공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똥약’은 분업 이전에 성행했던 할인이나 할증 같은 일종의 리베이트에 의해 거래되는 약을 말하는데요, 당연히 현행 약 실거래가 상환제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게다가 약의 효과와 안전성 등 품질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같은 종류의 다른 약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는 이런 약 보다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약효가 확실하게 인정된 것을 처방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제약사나 약계 일부에서는 이 약을 ‘एंटी리약’ 이다라고 부르면서 속칭 ‘똥약’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똥약’이 의사에 대한 로비를 통해 처방전이라는 조제 명령서로 소비자에게 투약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방 건담 얼마’ 이런 식으로 리베이트를 준다는 얘기는 의약계 바닥에서는 이미 구문이 된지 오래입니다. 한마디로 제약사는 보험약

가를 비싸게 책정해 그 약값의 일부를 의약사에 대한 로비로 쓰고 그 약값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다 타 먹는 것이지요. 결국 소비자는 제 주머니 다 털어 돈 다주고 싸구려 약을 비싸게 먹는 것입니다. 결국 약효 역시 불투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분업 3년째인데도 300여개 국내 제약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약 품질로 시장에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분업 이전처럼 이런 ‘똥약 승부’ 즉 리베이트로 승부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약값 거품제거를 위해 강제로 보험약값을 계속 인하시키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듯 싶습니다. 일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벌어지던 ‘똥약’ 처방은 이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이 당국의 단속을 피해 교묘하게 성행하면서 ‘똥약’ 처방을 늘리기 위한 그 루트가 더 다양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날약 처방이 늘어 큰 일이라고 난리를 치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앵터리 약, 즉 ‘똥약’이 난리를 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죠.

최근 새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분명 처방’을 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의약계가 또 한 판 불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약계 주장대로 성분명 처방이 되면 대체조제가 활성화돼 환자 편의가 증대되고 약값이 절감돼 보험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문제 많은 ‘똥약’ 처방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런 ‘똥약’ 처방을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면 또 다른 형태의 ‘똥약’ 투약을 양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똥약’ 처방과 투약에 따른 추가(?) 이윤을 막지 못하는 한 소비자는 ‘똥약’을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영원히....